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2017. 9

권영준

머 리 말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해사망특약이 부가된 생명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자살자의 유족들이 갖는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갖는 실무적 중요성을 반영하듯 그동안 이에 관한 많은 판결들이 선고되었으나, 소멸시효 일반론과 보험금청구권의 특유한 문제들을 연결시킨 체계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이에 소멸시효 일반론에서 출발하되 보험금청구권에 특유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최근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분석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들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들과 비교해보며, 그 토대 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이론 체계와 입법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9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1

II. 소멸시효 일반론 / 13

1. 소멸시효의 의의 / 13
2. 소멸시효 기산점 / 18
3. 소멸시효 기간 / 22
4.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 26
5. 소멸시효와 신의칙 / 28
6.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개정안 / 30

III. 관련 판례 분석 / 33

1. 개관 / 33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34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 47
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 50
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신의칙 / 53

IV. 관련 법안 분석 / 56

1. 개관 / 56
2.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법안 / 57
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일반 관련 법안 / 63
4. 종합 검토 / 81

V. 결론 / 83

| 참고문헌 | / 84

■ 표 차례

- 〈표 II-1〉 민법 및 상법의 소멸시효 기간 체계 / 23
- 〈표 III-1〉 약관 유형별 대법원 판결 / 53
- 〈표 IV-1〉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법안 / 56
- 〈표 IV-2〉 쟁점별 정리 / 57
- 〈표 IV-3〉 국가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 71
- 〈표 IV-4〉 법안별 종합 검토 / 82

Insurance Claim and Extinctive Prescription

This report deals with the iss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concerning insurance claim. It starts by giving general account on extinctive prescription including the issue of starting point of the prescription period, the length of the prescription period, the interruption of the prescrip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od faith and extinctive prescription. It then analyzes Supreme Court decisions on each issue. Finally, it introduces and evaluates six legislative bills on this issue now pending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doing so, statutes in the foreign jurisdictions are also referenced.

요약

I. 서론

■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문제의 중요성

- 보험금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비교적 단기임
-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숫자가 적지 않고 그 분쟁의 치열함도 만만치 않음
- 최근에는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자살자의 유족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분쟁의 주된 쟁점이 되면서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문제가 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
- 이에 비례하여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민법을 중심으로 한 소멸시효 법 전체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성

- 전통적으로 소멸시효는 민법학,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법학의 문제로 여겨져 왔는데, 양자의 논의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면도 있음
- 20대 국회에 보험금청구권자들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하여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민법을 위시한 법질서 전체의 소멸시효 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의 검토 대상

- 소멸시효 일반론 소개
-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 분석
-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대한 법안 분석

II. 소멸시효 일반론

■ 소멸시효의 의의

-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임
- 시효제도의 정당성 근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임
- 소멸시효제도 내부에는 구체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로운 도모를 위한 여러 법적 장치들을 두고 있음. 소멸시효 기산점, 기간, 중단과 정지, 신의칙이 그러한 조정 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민법 제166조 제1항)
- 우리 판례와 학설은 그 의미와 관련하여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을 전개하여 왔음. 법률상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사실상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함
- 법률상 장애는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의 사유가 있는 등 권리 그 자체에 내재하는 권리 행사의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사실상 장애는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았지만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 개인 사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였거나, 채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권리 행사에 법적 제약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다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을 완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소멸시효 기간

- 현행 민/상법상 소멸시효 기간 체계는 아래와 같음

〈요약 표-1〉 민법 및 상법의 소멸시효 기간 체계

시효 기간	채권 유형	관련 조항	비고
10년	일반 민사채권	민법 제162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10년으로 연장
	사채상환청구권 등	상법 제487조 제1, 2항	-
5년	일반 상사채권	상법 제64조	다른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주주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	상법 제464조의2	-
	사채이자청구권/ 이권소지인의 공제액지급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3항	-
3년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 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 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 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 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 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 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 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 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 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조	-
2년	보험료청구권	상법 제662조	-
	항공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919조	-

〈요약 표-1〉의 계속

시효 기간	채권 유형	관련 조항	비고
1년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해당금의 채권	민법 제164조	-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속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채권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22조	-	
창고업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채권	상법 제166조	물건 출고일로부터 기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67조	물건 출고일로부터 기산	
6개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채권	상법 제154조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때부터 기산

○ 국제적으로 보면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입법 추세는 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주관적 체계의 요소를 가미하면서 ② 소멸시효 기간은 단축하고 ③ 소멸시효 기간 체계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

■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 소멸시효 중단은 진행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멈추어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고 새롭게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도록 하는 사유임.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①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의 세 가지를 들고 있음

○ 소멸시효 정지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는 소멸시

효가 완성되지 않고 그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임. 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는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및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제182조)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소멸시효와 신의칙

- 판례는 그동안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여 왔음
-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음

-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 ④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만 신의칙에 너무 손쉽게 의거함으로써 소멸시효제도 자체의 의미를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보고서에 관련된 부분만)

-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과 최장기간 설정
-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기존의 객관적 체계(즉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 체계) 대신 주관적 체계(즉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에 관한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이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 체계)를 도입하였다(제162조 제1, 2항). 한편 주관적 체계로만 일관할 경우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더불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되는 소멸시효의 최장기간을 설정하

여 소멸시효가 무제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였다(제162조 제3항).

○ 일반 소멸시효 기간의 단축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다(제162조 제1항). 이는 주관적 체계를 도입한 것과 맞물린 변화이다. 다만 이와 별도로 소멸시효의 최장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다(제162조 제3항).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결과적으로 소멸시효가 짧아지게 되었다.

○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삭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4조를 모두 삭제하였다. 복잡한 소멸시효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 기간의 체계가 일반소멸시효 기간으로 일원화되었다.

Ⅲ. 관련 판례 분석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원칙 - 보험사고 발생 시

○ 예외 - 1)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

○ 1)은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비추어 당연함. 2)는 보험금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기대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보험금청구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를 보호할 사회정책적 필요도 있다는 점 등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숨은 근거들임. 실제로 예외를 인정한 사안들을 보면 교통사고 피해의 유족들이 보험금청구권자들이었음

○ 2)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는 대법원 1993. 7. 13, 92다39822 판결과 대법원 2001. 4. 27, 2000다31168 판결 정도임. 그런데 이 두 판결은 모두 보험금청구권자 개인이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마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파악하였다

가 나중에 확정판결을 통해 정정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음. 이처럼 보험금청구권자 개인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국가기관마저도 그 사실관계를 반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이 사건들에 예외를 인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음. 그러므로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자 개인이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동정하거나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움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례를 통한 해석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 다만 구상금 채권이나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것인가에 관한 판례들은 있음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계속적 최고에 관한 판례가 있음
- 이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금 지급 이행 유예를 구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회답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됨
- 이는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의 판례임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신의칙

- 대법원 2016. 9. 30, 2016다218713, 218720 판결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신의칙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이 판결은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현재까지 확립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려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누구라도 권리의 존재를 알 수 없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이 행동하여 채권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부여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는 변제를 하면서 해당 채권자에게는 이행을 거절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함
- 그런데 이 사건에 존재하는 사정은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IV. 관련 법안 분석

〈요약 표-2〉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법안

의안 번호	관련 법률	대표 발의자	제안일자	심사진행상태 (2017. 8. 16 기준)
2000833	보험업법(개정)	박용진	2016. 7. 12	소관위접수
2001017	상법(개정)	주승용	2016. 7. 21	소관위접수
2002957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신설)	김선동	2016. 10. 27	소관위접수
2004888	상법(개정)	정재호	2016. 12. 30	소관위접수
2005111	상법(개정)	김해영	2017. 1. 16	소관위접수
2005406	상법(개정)	민병두	2017. 2. 2	소관위접수

〈요약 표-3〉 쟁점별 정리

쟁점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소멸시효 기산점 변경	김선동 의원안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 시효 특례 규정
소멸시효 기간 연장	정재호 의원안, 김해영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	박용진 의원안, 주승용 의원안	보험금지급청구 또는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

〈요약 표-4〉 법안별 종합 검토

쟁점	관련 법안	내용	입장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 특별법	김선동 의원안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변경 내지 기간 연장, 소멸시효 완성효 번복	특정한 유형의 보험상품 에서 파생된 문제만을 다 루고 있고 소급입법 논란 의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 하지 않음
소멸시효 기간 연장	정재호 의원안, 김해영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 한다면 입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안임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	민병두 의원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	민법 소멸시효 체계 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장기 과제임. 만약 이를 단기간 내에 입법한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현행법과 같이 3년 으로 유지하고, “알 수 있 었을 때”도 요건으로 추가 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객관적 체계에 따른 5년 의 상한선이 있는 것이 바람직함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	민병두 의원안	보험금 지급 유예 시 보험 자 결정 서면 도달 시까지 시효 정지	입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안임. 표현 수정 필요

〈요약 표-4〉의 계속

쟁점	관련 법안	내용	입장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	박용진 의원안, 주승용 의원안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부지급,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자 귀 책 사유로 인한 부지급은 시 효중단사유로 부적절, 금융 분쟁조정신청은 시효중단사 유로 적절(단, 상법이 아닌 금융위원회법 개정)
설명 의무 위반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김혜영 의원안	설명 의무 미이행 등의 경우에 소멸시효 미적용	설명 의무 위반과 소멸시효 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

I. 서론

보험금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소멸시효에 관한 기본적인 규율을 제공하는 규범은 민법이다. 민법 제1편 총칙편에는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162조부터 제184조까지 모두 23개 조항이 있다. 그 중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러한 민법의 기본 규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재산권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칙을 둘 수 있다. 실제로 상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여러 특별법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들이 있다. 그 중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특칙으로는 상법 제662조가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이나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5년)보다 짧은 3년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짧은 만큼 보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할 가능성도 일반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도 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는 불행한 사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보험사고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보험에 의한 부조(扶助)의 필요성도 크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자 중에는 소멸시효제도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에 익숙하지 못한 보험 소비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소멸 가능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미처 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인지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그 숫자가 적지 않고, 그 치열함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자살자의 유족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

상이 되었다. 그런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사안 유형에서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계기로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의 문제를 다루는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필요성도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소멸시효는 민법학,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법학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민법학과 보험법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부 분야인데도 학문 분야 사이의 인위적 경계 때문인지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학의 일반 논의와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보험법학의 개별 논의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편 국회에는 보험금청구권자들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의 배후에 있는 정책적 목표 그 자체는 수궁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청구권자들을 더욱 강하게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이러한 법안들에 도입된 법적 장치들이 민법을 위시한 법질서 전체의 소멸시효 체계와 충분히 정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물론 이 보고서를 통하여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라는 주제를 완결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한 논의는 향후 지속될 필요가 있고, 이 보고서는 다른 여러 문헌들과 더불어 이에 필요한 기초 논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동안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하여 축적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하여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주제에 관한 현재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돌아보고 성찰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작업의 전제 조건으로 소멸시효 일반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멸시효 일반론도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하에 이 보고서는 『Ⅱ. 소멸시효 일반론』 ⇒ 『Ⅲ. 관련 판례 분석』 ⇒ 『Ⅳ. 관련 법안 검토』 ⇒ 『Ⅴ.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소멸시효 일반론

1. 소멸시효의 의의

가. 소멸시효제도의 개념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 그대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제도이다.¹⁾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반대로 취득시효제도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소유할 의사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²⁾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 상태와 일정한 기간 경과라는 두 가지 사실적 요소를 구성 요소로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적 요소가 합쳐져 일정한 권리관계로 이어진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형성되는 권리관계는 정반대이다. 소멸시효는 권리소멸로 이어지고, 취득시효는 권리취득으로 이어진다. 양자는 시효제도라는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법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법은 총칙편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물권편 제245조 이하에서 취득시효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각각 두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채권편 제766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라는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민법 제162조 이하의 소멸시효제도이다.

1) 김용담 편(2010a)

2) 김용담 편(2010b)

나. 소멸시효제도의 정당성

시효제도는 얼핏 생각하면 정의의 관념에 배치된다. 권리자임이 분명한데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소멸하고 의무자가 의무를 면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무권리자임이 분명한데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거나 그 물권에 관한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고 기존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는 관념에 익숙해진 일반인으로서 하늘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의가 무너지는 사태를 수긍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한 시효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변환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양 철학에서 태동한 사실(Sein)/당위(Sollen) 이분론에 익숙하다. 이러한 이분론은 양자의 구분을 일견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이는 시효제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시효제도에 대한 부정적 혹은 유보적 관점은 비단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은 시효제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시효와 관련된 제반 규정들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효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 대법원은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는데,³⁾ 이 역시 위와 같은 유보적 관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로마법 이래 시효제도가 인정되어 온 것이나,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가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법적 가치의 체계는 “권리자는 언제까지라도, 또한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선적인 정의 관념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법적 가치의 체계는 정의를 포함하여 수많은 다양한 가치 요청들의 조화로운 융합체이다. 그 중 중요한 가치 요청 중 하나가 법적 안정성이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볼썽치

3) 대판 1995. 5. 12, 94다24336; 대판 2006. 6. 16, 2005다25632; 대판 2015. 5. 14, 2014다16494 참조

럼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법 생활에 필수적인 가치이다. 우리의 법 생활은 우리가 오랜 시간 구축해 온 사실상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결코 검정색 또는 흰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유채색이 공존하면서 어우러져 구성되어 있다는 솔직한 관찰에 기초한다. 오랜 시간 계속된 사실상태가 단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여 이를 뒤엎어버리는 일도양단식의 판단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사실상태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여도 그 사실상태에 기초하여 새롭게 맺어진 다수의 법률관계를 폭넓게 고려하여 이를 존중하는 유연한 판단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필자는 소멸시효제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과거 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원문의 각주는 모두 생략하였다).⁴⁾

오늘날 소멸시효제도의 가장 강력한 존재근거는 법적 안정성이다. 소멸시효제도의 맥락 속에서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유동적인 법률상태의 '매듭짓기'이다.

우선 이는 의무자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위와 같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는 의무자의 후속적인 의사결정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이 존재하는 한, 또한 그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 분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제반 의사결정은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의무자는 관련된 서류를 계속 보관하여야 하고, 이에 대비한 예산을 계속 책정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일 술하게 영위되는 기업 활동 속에서 사용자책임이나 공작물책임을 부담할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소멸시효제도가 없다면 수십 년, 심지어는 수백 년 전의 기업 활동에 대한 책임이 추궁될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리자가 언제 권리를 행사하는가하는 외부적 요소에 따라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의 지속기간이 좌우된다. 만약 의무자가 관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는데 그 신뢰에 반하여 관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의무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거나 불안한 상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매듭지어주는 것은 의무자의 위와 같은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주목할 것은 사회적 관점이다. 위에서 의무자의 고충을 이야기하였지만, 많은 경우 의무자는 스스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안정한 법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리자-의무자의 구도 안에서만 소멸시효제도를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

4) 권영준(2009. 6)

다. 소멸시효제도는 사회적 관점을 끌어올 때 비로소 온전한 설득력을 가진다. 불안정한 법률상태 또는 분쟁을 일정한 시기 내에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활동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거래의 촉진이 저해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권리행사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거래나 활동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가 더 큰 효용을 부여하는 재화나 용역의 교환을 통하여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거래의 본질이라면, 이러한 거래촉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분쟁이 오래될수록 사법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오래된 증거와 진술, 그리고 이에 관하여 엇갈리는 쌍방의 공방 속에서 사법비용은 증가하고 진실발견의 가능성은 감소한다. 판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권리자로 하여금 조속하게 법질서에 호소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할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여 불안정한 법률 상태를 매듭짓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점이 개입하면, 단지 “돈을 빌리고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갚지 않는” 개인적인 구도를 벗어나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시효제도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매듭짓기 담론을 선험 받아들이 수 없다면, 이는 일단 발생한 권리는 언제까지라도 그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권리의 보호범위와 보호정도 및 보호기간은 각 권리의 특성과 그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도, 도산법상 채무자가 대가 없이 면책되는 것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일정한 기간만 보호되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권리의 보호기간에 대한 제한은 소멸시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권리의 보호 필요성은 점점 약화되고, 이에 비례하여 권리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요청도 약화된다. 이것은 일반인의 법관념과도 일치한다. 소멸시효제도는 이처럼 권리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다. 소멸시효제도 내의 가치 조정 수단

그런데 소멸시효제도는 단순히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권리소멸을 선고하고 마는 제도가 아니다. 소멸시효제도 내부에서도 시효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 요청들을 반영하는 법적 장치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권리자와 의무자, 그리고 그들이 함께 속한 공동체의 이익들이 세밀하게 형량된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가는 소멸시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산점을 뒤로 늦출수록 권리자에게 유리하고, 기산점을 앞당길수록 의무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기산점을 권리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의존시킬수록 권리자에게 유리하고(이를 제도화한 것이 이른바 주관적 체계임), 권리 발생 또는 권리 행사 가능성이라는 객관적 요소에 의존시킬수록 의무자에게 유리하다(이를 제도화한 것이 이른바 객관적 체계임). 이처럼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률 조항 또는 그 법률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권리자와 의무자 간 이익 상황의 조정을 꾀할 수 있다.

둘째, 소멸시효 기간이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 그런데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소멸시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권리자에게 유리하고, 기간을 짧게 설정할수록 의무자에게 유리하다. 기간의 장단은 거래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간이 길게 설정될수록 권리자에 대한 보호는 강해지지만, 거래관계가 완결되지 않고 불확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대로 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권리자에 대한 보호는 약해지고, 거래관계로부터 비롯된 권리와 의무가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소멸되어 그 거래관계가 완결된다.

셋째,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이다.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달리 도중에 중단되어 새로 시효 기간이 진행되기도 하고, 정지되어 시효 기간의 진행이 멈추기도 한다. 중단 사유나 정지 사유가 많을수록 권리자에게 유리하고, 적을수록 의무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중단 사유나 정지 사유를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는가 하는 점도 이러한 이익 상황에 중요한 변수이다.

넷째, 신의칙이다. 소멸시효와 신의칙은 별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소박한 정의 관념에 기초한 거부감이 있고, 그 거부감에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그런데 법률이 이러한 상황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제도의 여러 가지 법적 장치만으로는 걸러낼 수 없지만, 정의 관념이나 형평 관념에 비추어 소멸시효의 기계적인 적용에 따른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 최

후의 보루인 신의칙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런데 신의칙은 매우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소멸시효의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이처럼 소멸시효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간, 중단과 정지, 신의칙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는 이 보고서에서 살펴 볼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라는 주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네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일반론을 소개한다.

2. 소멸시효 기산점

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그 기간의 출발점을 기산점이라고 한다. 기산점에 대한 일반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임을 명언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정신의 반영임을 떠올려 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리자가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가 늘 명확하지는 않다. 판례와 학설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이분론에 따르면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 때에는 시효 기간이 진행하지 않지만, ‘사실상 장애’가 있는 때에는 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즉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

를상 장애가 없는 때”로 해석한다. 여기서 법률상 장애는 기한의 미도래, 조건 불성취 등 권리 그 자체에 내재하는 권리 행사의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⁵⁾ 사실상 장애는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았지만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 개인 사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였거나, 채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권리 행사에 법적 제약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의 완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주로 문제되는 상황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던 경우이다. 이는 전형적인 사실상 장애 사유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어도 시효 기간은 진행된다.⁶⁾ 또한 법의 부지(不知)나 법적 문제에 대한 평가의 잘못도 사실상 장애에 해당한다. 심지어 종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이를 믿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도 시효 기간은 판례 변경 시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진행된다.⁷⁾ 이러한 해석론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와 객관적 체계 중 객관적 체계에 기초한 것이다. 권리자가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존

5) 김용담 편(2010a); 판례도 같은 견해를 취함. 대판 1998. 2. 13, 97다47675; 대판 1992. 12. 22, 92다28822

6) 대판 1981. 6. 9, 80다316; 대판 2001. 4. 27, 2000다31168; 대판 2005. 12. 23, 2005다59383; 대판 2008. 11. 13, 2007다19624 등

7) 대판 2010. 9. 9, 2008다15865

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나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는 “법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 원리에도 어긋난다.⁸⁾

물론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사실상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당연히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장애로 분류되는 사유 가운데에도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도 판례는 아래와 같이 전통적인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의 틀 내에서는 사실상 장애로 분류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법률상 장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 대판 1977. 12. 13, 77다1048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민법 제570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일반채무의 이행불능인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계약의 해제를 함이 없이 곧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배상청구권은 이전불능임을 매수인이 안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판 1993. 7. 13, 92다39822

(대판 2001. 4. 27, 2000다31168; 대판 2005. 9. 24, 2005다59383, 59390도 같은 취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8) 권영준(2017. 2)

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판 2003. 2. 11, 99다66427

(대판 2003. 4. 8, 2002다64957도 같은 취지)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거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판 2012. 4. 13, 2009다33754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 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위 3년의 단기시효 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북자에 대한 실종 선고심판이 확정되게 되면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채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뿐이다).

이러한 판례들에서 문제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의 틀 내에서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

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에는 해당한다. 결국 이러한 판례들은 주관적 인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객관적 기대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궁극적으로 권리 행사의 객관적 기대가능성에 기초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위 판례들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이단아가 아니다. 그 틀 내에서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판례들이다.

3. 소멸시효 기간

가. 현행법상 소멸시효 기간 체계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일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은 민법 제162조이다.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제2항에 따르면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재판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채권의 소멸시효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논의도 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달리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논의는 해석론보다는 입법론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입법론을 전개하려면 먼저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현행법의 체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아래 표는 민법과 상법에 규정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기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Ⅱ-1〉 민법 및 상법의 소멸시효 기간 체계

시효 기간	채권 유형	관련 조항	비고
10년	일반 민사채권	민법 제162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10년으로 연장
	사채상환청구권 등	상법 제487조 제1, 2항	-
5년	일반 상사채권	상법 제64조	다른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주주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	상법 제464조의2	-
	사채이자청구권/ 이권소지인의 공제액지급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3항	-
3년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 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 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 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 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 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 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민법 제163조	-

〈표 II-1〉의 계속

시효 기간	채권 유형	관련 조항	비고
3년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조	-
2년	보험료청구권	상법 제662조	-
	항공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919조	-
1년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4조	-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채권	상법 제121조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기산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22조	-
	창고업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채권	상법 제166조	물건 출고일로부터 기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67조	물건 출고일로부터 기산
6개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채권	상법 제154조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때부터 기산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민법과 상법의 소멸시효 기간 체계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특별법의 소멸시효 기간까지 더하면 이 표는 훨씬 복잡해진다. 소멸시효 기간 체계가 복잡한 이유는 10년(민사)과 5년(상사)으로 각각 구성된 일반 소멸시효 기간 외에 3년, 2년, 1년, 6개월 등 다양한 단기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기소멸시효제도의 근거로는 “이들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상거래의 관행이라는 점,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의 채권으로서 영수증 등도 장기에 걸쳐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특히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정기급부채권의 경우는 오래 방치해 두었다가 일거에 변제를 요구하면 채무자를 경제적 파탄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⁹⁾ 그러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액채권자에게 불리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채권을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소멸시효제도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비판론도 있다.¹⁰⁾

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국제적 동향

국제적으로 보면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입법 추세는 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주관적 체계의 요소를 가미하면서 ② 소멸시효 기간은 단축하고 ③ 소멸시효 기간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유럽계약법원칙(PECL)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되(14:201), 채무자의 신원 및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14:301) 입장을 취하여 일종의 주관적 체계를 채택하였다. 공통참조기준 초안(DCFR) 역시 유럽계약법원칙의 태도를 계승하여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Ⅲ. 7:203, 7:301). 프랑스는 2008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제2224조),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들(구법 제2271조-2275조)을 삭제하

9) 김용담 편(2010a)

10) 김용담 편(2010a)

였다. 독일은 본래 객관적 체계를 채택하면서 시효 기간을 30년으로 길게 설정하였는데, 2002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주관적 체계로 변경하고(제199조 제1항) 시효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줄였다(제195조).

소멸시효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태도를 취하여 온 일본의 경우 2017. 6. 2 공표된 개정 민법 제166조에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5년, ②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중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일본 민법 제167조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5년, ②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0년 중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민법 제169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전 일본 민법 제170조 내지 제174조에서는 3년, 2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복잡한 규정을 두었는데 개정 일본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흐름은 우리나라 소멸시효제도의 개편론으로도 이어졌다. 이에 관한 내용은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다루면서 소개하기로 한다.

4.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가.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은 진행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멈추어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고 새롭게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도록 하는 사유이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①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①과 ②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 ③은 의무자의 의무 인정과 관련이 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하였다면 권리 불행사를 전제로 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토대가 허물어진다. 즉 이 경우 권리자는 더 이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게 된다. 한편 의무자가 의무를 인정하였다면 굳이 그 의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경우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의무자의 승인을 통하여 명백해지고,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태를 존중할 필요성은 희박해진다.

①의 사유, 즉 청구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청구를 모두 포함한다.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의 시효중단 효력은 영구적이고 확정적이지만 재판 외 청구, 즉 최고(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효력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최고의 경우 6월 내에 그 보다 강력한 시효중단 조치(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를 취하여야 비로소 영구적이고 확정적인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②의 사유, 즉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절차 또는 보전절차에서의 권리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이다(민법 제175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통하여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공권적으로 인정된다.¹¹⁾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집행되어야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시효이익을 받을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면,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76조).

③의 사유, 즉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는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를 말한다.¹²⁾ 승인을 하는 자에게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그 승인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민법 제177조). 승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승인도 가능하다.¹³⁾

민법 외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11) 김용담 편(2010a)

12) 김용담 편(2010a)

13) 대판 1995. 9. 29, 95다30178; 대판 2000. 4. 25, 98다63193

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3호, 제147조, 제589조 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관세법 제23조, 국세기본법 제2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113조 등 각종 특별법 조항들은 그 특별법에 특유한 시효중단 사유들을 두고 있다.

나.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 정지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제거될 때까지, 또한 그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기간을 확보해주는 사유이다. 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는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및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제182조)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들은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권리자에게 그 상황을 면할 때까지 시효 기간의 완성을 저지하는 사유들로서, 시효완성일 직전 일정한 기간 동안은 권리행사를 확보해 주기 위한 의미도 가진다.

5. 소멸시효와 신의칙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민법 제1조가 법원(法源)에 관한 조항임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민법의 출발점을 장식하는 실체법적 원리이다. 이는 신의칙이 민법에서 갖는 위상을 짐작케 한다. 신의칙에 관한 원리는 본래 계약법의 영역에서 발달하여 왔지만 이제는 민법, 나아가 사법(私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원리이다. 그러므로 신의칙은 소멸시효의 법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판례는 그동안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여 왔다.¹⁴⁾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 ④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처럼 신의칙에 의거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봉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압도하는 구체적 정의의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감히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그 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우는 경우¹⁵⁾가 그러하다.

그런데 신의칙에 의거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쉽사리 부인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더구나 신의칙은 고도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원칙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법관의 자의로 흔들릴 위험도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소멸시효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⁶⁾ 또한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거나, 시효완성의 요건을 가중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제184조 제2항)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소멸시효제도의 균형점을 당사자가 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입법적 의지의 표현이다.

14) 대판 1997. 12. 12, 95다29895;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대판 2008. 9. 11, 2006다70189 등 다수

15) 가령 대판 2003. 7. 25, 2001다60392; 대판 2008. 9. 11, 2006다70189

16) 상세한 내용은 권영준(2009. 6) 참조

물론 신의칙은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는 것이지만, 그 적용 과정에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참고하여 신의칙 적용의 결과가 의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¹⁷⁾

6.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개정안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와 국제화라는 기치 아래 2009. 2. 4 민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2014. 2. 17까지 5년에 걸쳐 민법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시효에 관한 개정안은 민법 개정 작업 초기인 2010. 12. 3 입법예고되어 법인에 관한 개정안과 함께 제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시효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¹⁸⁾

○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과 최장기간 설정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기존의 객관적 체계(즉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 체계) 대신 주관적 체계(즉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에 관한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이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 체계)를 도입하였다(제162조 제1, 2항). 한편 주관적 체계로만 일관할 경우 소멸시효를

17) 대판 2011. 10. 27, 2011다54709 등 다수

18) 아래 내용은 권영준(2017)의 해당 부분을 발췌한 것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더불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되는 소멸시효의 최장기간을 설정하여 소멸시효가 무제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였다(제162조 제3항).

○ 일반 소멸시효 기간의 단축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다(제162조 제1항). 이는 주관적 체계를 도입한 것과 맞물린 변화이다. 다만 이와 별도로 소멸시효의 최장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다(제162조 제3항).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결과적으로 소멸시효가 짧아지게 되었다.

○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삭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4조를 모두 삭제하였다. 복잡한 소멸시효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 기간의 체계가 일반소멸시효 기간으로 일원화되었다.

○ 시효장애 사유의 정비

시효중단과 정지 등 시효장애 사유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제168조 내지 제178조의2). 기존의 시효중단과 정지의 개념을 폐기하고 그 대신 시효정지, 완성유예, 재개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시효정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서 개정시안에서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다. 시효의 완성유예는 기존의 시효정지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시효의 재개시는 기존의 시효중단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개정시안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 또는 그 결합(정지+재개시, 정지+완성유예)을 통해 시효장애 사유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하였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상대적 소멸설 채택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상대적 소멸설을 채택하였다(제183조 제1항). 이러한 개정시안의 태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여야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변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제766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해서는 그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구

체화하고 그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다(제766조 제2항). 한편 성적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멸시효 정지 사유로 하였다(제766조 제3항). 이러한 변경은 모두 피해자 보호라는 공통된 이념을 담고 있다.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이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①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② 5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주관적 체계를 도입하되, 객관적 체계에 따른 기간(10년)을 별도로 부가하여 계속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방지하고, ③ 3년 및 1년 단기소멸시효를 모두 폐지하여 5년으로 일원화한 점이다. 또한 ‘중단’과 ‘정지’로 구성되어 있던 소멸시효 장애 사유를 ‘① 정지(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됨.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처음부터 새롭게 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효 기간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단과는 구별됨) 사유, ② 정지 및 완성유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고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후에 시효가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단이나 순수한 정지와는 구별됨) 사유와 ③ 재개시(기존의 중단과 동일함) 사유의 세 가지 사유로 분리, 재정비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위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소멸시효제도가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그에 발맞추어 상법 등 특별법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Ⅲ. 관련 판례 분석

1. 개관

이 목차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이 판례들은 주로 다음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보험사고 발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주류적인 태도이나,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와 달리 보기도 한다. 판례가 이러한 원칙과 예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중요한 분석 포인트이다.

둘째, 보험금청구권과 관련된 인접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판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보험금청구권과 관련된 인접 권리, 가령 보험금을 지급한 뒤 취득하는 구상권이나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청구는 최고의 효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비롯한 더 강한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중단 효력은 사라진다. 그런데 판례는 보험금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청구에 대해 보험회사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 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보험금청구에 대해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지만, 그 항변이 신의칙에 위

반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자살에 관한 재해사망보험금 사례에서 이러한 점이 다투어졌다. 이에 대해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 원칙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로 머무를 뿐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이 권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구체적인 권리로 변환·확정되고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¹⁹⁾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다.²⁰⁾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이다.²¹⁾ 따라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보험계약 해석을 통하여 결정한다. 예컨대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²²⁾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결정한다. 비록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

19) 대판 2000. 3. 23, 99다66878; 대판 2008. 11. 13, 2007다19624; 대판 2009. 7. 9, 2009다14340

20) 대판 2012. 8. 23, 2012다18748 등

21) 대판 2014. 7. 24, 2013다27978

22) 대판 2006. 4. 28, 2004다16976; 대판 2010. 3. 11, 2009다41366; 대판 2014. 7. 24, 2013다27978 등

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봉쇄되지 않는다.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는데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금청구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권리자의 희생 위에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현행 소멸시효제도를 수긍하는 이상 불가피한 결과이다.

나. 예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들이 있다.

1)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 법률상 장애가 제거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르러야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여 그 장애가 제거된 시점이 기산점에 해당한다.

우선 보험계약에서 별도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이 보험사고 발생 후 일정한 절차를 밟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대법원 2014. 7. 24, 2013다27978 판결은 약관 등에서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였다.

또한 법률 조항의 해석 결과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이 달리 정해질 수도 있다. 예컨대 상법 제723조는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고(제1항),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이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둔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이 규정을 읽으면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배상책임이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확정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²³⁾ 판례도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배상 책임 확정 시점으로 보고 있다.²⁴⁾

또한 대법원 2010. 10. 14, 2010다32276 판결은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의 확정절차를 마쳐야 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위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였다.

2)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때에는 보험사고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즉 대법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

23) 한기정(2017)

24) 대판 1988. 6. 14, 87다카2276; 대판 2002. 9. 6, 2002다30206

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판시하였다.²⁵⁾ 이러한 법리는 공제금청구권에도 적용된다.²⁶⁾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한지, 보험금청구권자가 언제부터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사실 인정의 문제이다. 예컨대 대법원은 군 복무 중 자살한 甲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甲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결정을 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²⁷⁾

다.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판례 분석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원칙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두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 즉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런데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리는 객관적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례적으로 보이는 법리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현행 소멸시효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객관적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다. 객관적 체계에서는 권리 행사의 객관적 기대가능성을 궁극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기 어려웠다면 권리 행사의 객관적 기대가능성

25) 대판 2001. 4. 27, 2000다31168; 대판 2008. 11. 13, 2007다19624; 대판 2012. 9. 27, 2010다101776 등 다수

26) 대판 2007. 12. 13, 2007다58339

27) 대판 2015. 9. 24, 2015다30398

도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언제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내용과 특성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가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은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판단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1) 대법원 1993. 7. 13, 92다39822 판결(긍정례)

이 판결에서는 장기운전자복지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인 교통사고는 1988. 3. 11에 발생하였다.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A였다. A는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A는 이 사건 계약의 피보험자였고, 그 보험수익자는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었다. 원고들은 본래 위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A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는 B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B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 B는 1990. 7. 4 제1심 법원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은 이때서야 A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다. 원고들은 장기운전자복지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90. 11. 23에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시행되던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이였다. 그런데 보험사고인 교통사고 발생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소 제기 시점 이전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 제기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 그런데 원심 법원과 대법원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그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

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1990. 7. 4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국가기관의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교통사고였다.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대상 사실관계가 일정한 불확정성과 유동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게 된다.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불확정한 장기에 걸쳐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지도 않으면 보험금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은 위협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수사와 재판 절차가 처음부터 B의 교통사고임을 전제로 진행되었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A가 야기한 교통사고였다는 점은 원고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공식적인 무대에서도 아예 배제되어 그 무대 뒤에 묻혀 있었던 셈이다. 시효는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승화시키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실관계 자체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알 수 없었던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시효가 진행된다고는 하는 것은 가혹하다. 또한 이러한 불가피한 상태에서 권리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결국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권리 행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대법원 1997. 11. 11, 97다36521 판결(부정례)

이 판결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다. A는 차량을 소유하면서 보험회사(원고)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한편 B는 그 차량을 A로부터 빌려 C, D를 태워 운

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B의 아버지(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교통 사고는 불법 렌트차량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듣고 소 제기를 보류하였다. 하지만 C의 유족과 D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뒤늦게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대법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일반론을 제시한 뒤,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사고 발생 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한다”라고 판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분명히 인식하였지만 보험회사의 잘못된 안내를 받아 그 사고로는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에 이른 데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있던 C의 유족과 D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도 중요하게 참작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정황은 피고가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통보 내지 안내한 뒤 그 안내가 잘못된 것임을 안 보험금청구권자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는 소멸시효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유형 중 하나인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3) 대법원 1999. 2. 23, 98다60613 판결(부정례)

이 판결은 횡령 사건을 다루고 있다.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증권회사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하였다. 한편 보증보험회사는 증권회사와 사이에 위 지점장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증권회사는 위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다. 증권회사는 피보증인인 지점장이 증권회사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받은 돈을 횡령한 것이라거나 위 금원은 예탁금이 아니라 자신과 고객 간의 금전소비대차라고 해명하는 바람에 증권회사로서는 바로 횡령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험금청구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권회사는 지점장이 그 전에 횡령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서 더욱 더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한 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보증인의 위 횡령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과실 없이 그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횡령행위가 발생하였던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제반 사정은 증권회사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회사가 ○○○(지점장)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회사가 그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회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증권회사에게도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가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증권회사에게는 자신이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점장의 잘못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귀책 사유, 또한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점장의 거짓 해명에 휘둘리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었다. 이는 결국 외부로부터 강요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증권회사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던 사정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칙과 달리 늦출 수는 없다. 이 판결은 이러한 고려하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칙을 변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에도 적용한 것이다.

4) 대법원 2001. 4. 27. 2000다31168 판결(공정례)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루었다. 원고는 A 소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소유 차량의 보험자이다.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A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A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또한 B의 차량에는 B의 두 아들(7세, 5세)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 중 둘째 아들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뒤 다음 날 사망하였다.

그런데 당시 교통사고를 조사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게 A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결론짓고 A를 형사입건한 뒤 그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한 B와 그의 가족들은 A의 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B는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원래 사실관계하에서는 청구할 수 있었던 자손 및 자차 보험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A의 유족들은 중앙선을 넘은 사람은 A가 아니라 B라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B는 원고로부터 이미 받았던 보험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B에게는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

해 갖는 자손 및 자차 보험금채권을 A의 유족들에게 양도하였다. 문제는 이 보험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기존의 일반론을 되풀이한 뒤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우선 B는 교통사고의 가해자이므로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관계에 의거할 때 자신이 피고에 대해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는 그의 생존 아들(사고 당시 7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를 위해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령 교통사고 조사기관이 A의 중앙선 침범으로 결론을 내렸더라도 B와 그의 7세 아들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였고 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반면 사망한 B의 다른 아들이 가지던 보험금청구권은 B와 B의 생존 아들, B의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는데, 그 중 사고 현장에 있지 않던 B의 처는 교통사고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도 A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조사하여 그런 결론을 내린 상태였으므로 민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한하여는 보험사고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B의 처가 상속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산점을 민사판결 확정 시로 봄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앞서 살펴 본 대법원 1993. 7. 13, 92다39822 판결과 유사하다. 두 판결의 사건 모두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이었다. 두 사건 모두 처음부터 수사가 사실관계와 달리 진행되어 사실관계와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두 사건 모두 보험금청구권자가 교통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두 사건 모두 수사 결과가 법원의 판결로 뒤집어졌고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보험금청구권자의 객관적인 권리 행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5) 대법원 2012. 9. 27, 2010다101776 판결(공정례)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루었다. 원고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판결문의 전체 취지상으로는 임차인으로 추정됨)이고, 피고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다. 원고는 중개업자인 A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A는 피고의 공제에 가입해 있었다. 당시 피고의 공제약관에는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제1조),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제2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A의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건물주인 B로부터 건물인도 등의 청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대법원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보험사고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론을 원용한 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 2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한 공제사업은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그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2007다58339 판결²⁸⁾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8. 무렵 건물주인 송규명으로부터 건물인도 등의 청구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때에 원고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

28) 이 판결은 외부에 공개된 판결 데이터베이스(종합법률정보나 법고을 LX)상에서는 검색되지 않음

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비로소 원고의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로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공제사고 발생 시인 중개행위 시가 아니라 그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때에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공제약관에 따르면 공제사고는 부동산중개행위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이다. 따라서 공제사고는 잘못된 중개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본 도식이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공제약관의 해석상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라야 한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잠복되어 있거나 장차 발생할 손해를 현재 시점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아직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면 그 채무 상당액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²⁹⁾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제3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행을 구하지 않아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는 관계로 선부른 채무액 상당 손해배상이 부당한 망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건물주인 B로부터 실제로 건물인도 등의 청구를 받기 전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건물인도채무가 현실적·확정적이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건물인도 등의 청구를 받았을 때 비로소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공제약관에 따르면 그때 비로소 공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공제약관의 해석과 손해의 현실성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론이다.

29) 대판 1992. 11. 27, 92다29948; 대판 2001. 7. 13, 2001다22833

6) 소결론

요약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예외는 보험금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기대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보험금청구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를 보호할 사회정책적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숨은 근거들이다. 실제로 예외를 인정한 사안들을 보면 교통사고 피해의 유족들이 보험금청구권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제약관의 해석상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대법원 2012. 9. 27, 2010다101776 판결을 제외하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한 사례는 대법원 1993. 7. 13, 92다39822 판결과 대법원 2001. 4. 27, 2000다31168 판결 정도이다. 그런데 이 두 판결은 모두 보험금청구권자 개인이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마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파악하였다가 나중에 확정판결을 통해 정정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보험금청구권자 개인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국가기관마저도 그 사실관계를 반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이 사건들에 예외를 인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자 개인이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동정하거나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가. 관련 규정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한다. 원래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된 상법(2015. 3. 12 시행)에서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는 200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당시 개정 이유에서는 기간 연장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다.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제662조)

- 1)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비교적 단기여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 2)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으로,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
- 3)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종래의 2년이든, 개정 이후의 3년이든 일반민사채권의 10년, 일반상사채권의 5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단기이다.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를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운용을 위하여는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를 통하여 보험업자의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³⁰⁾ 이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2년이던 시절 선고된 것이지만, 그 취지는 시효가 3년으로 연장된 현재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30) 대판 1995. 3. 28, 94다47094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인이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 내에서 통계적 기초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기금을 만든 뒤 보험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보험제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있고, 신속한 보험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공동기금을 둘러싼 불명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단기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어쨌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법률로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판례나 학설을 통하여 이 기간을 변경할 여지는 없다. 이는 입법론의 대상일 뿐이다. 다만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보험금청구권과 유사한 다른 관련 권리에도 적용되는지는 해석론의 대상이다. 아래에서 관련 판례들을 살펴본다.

나. 관련 권리들의 소멸시효 기간

1) 구상금채권

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가 복수인데 그 중 한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보험금청구에 따른 보험금지급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보험금청구권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구상금채권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다룬 것이 대법원 2006. 11. 10, 2005다35516 판결이다. 이 판결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함)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

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한편 대법원은 복수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그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고, 보험자와 다른 보험자는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상금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당시 상법에 따른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보험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과 다른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중 어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사안마다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³¹⁾ 반면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도 자동차

31) 대판 2008. 12. 11, 2008다47886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문제되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10년의 민사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³²⁾

이처럼 대법원이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통일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말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채권, 즉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래는 10년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관계가 실질적으로 상사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즉 상거래로 인한 채권 못지 않게 상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관계로 인한 채권에도 상거래 특유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할 때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규정을 이 법률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한 사례는 비록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유추 적용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대법원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중 어느 것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청산적인 법률관계를 비교적 단기간 내에 종결시킬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로 보아 사안별로 다른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³³⁾

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보험금청구권에 특유한 문제를 다루는 판례들은 많지 않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자가 재판상 청구의 방식이 아니라 최고의 효력을 갖는 재판 외의 방식으로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 그 최고의 효력이 지속되는가에 관하여 다른

32) 대판 2010. 10. 14, 2010다32276

33) 양창수·권영준(2017)

대법원 판결들이 있다.

이 판결들의 전거가 된 판결은 대법원 1995. 5. 12, 94다24336 판결이다. 이 판결은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이다. 이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그 후 이러한 취지는 보험금청구권을 다룬 대법원 2006. 4. 28,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0. 5. 27, 2010다9467 판결, 대법원 2012. 3. 15, 2010다53198 판결에도 적용되었다. 가장 최근 판결인 대법원 2012. 3. 15, 2010다53198 판결은 위 일반론을 제시한 뒤 “원고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 담당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원고의 주치의들을 찾아가 인과관계 및 장애정도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한 일련의 조치는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할 때까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최고의 효력에 관한 해석론을 통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 판결들이다.

여기에 적용된 법리는 다음과 같다. 시효중단 사유 중에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에는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 외의 청구가 있다. 그 중 재판 외의 청구는 최고(催告)라고 한다. 그런데 최고의 시효중단효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다. 즉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참가절차,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은 영구적,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 조건적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뒤 6개월 내에 소의 제기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보험사고 발생 시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뒤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시효중단제도의 기산점은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대전제 위에서 이른바 ‘계속적 최고’라는 법리를 창안해 내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최고를 한 뒤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이행 준비와 범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구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 어떤 경우에 유예를 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도 이행의 유예를 구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뒤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해석론에 따른 중단효의 확장이다.

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신의칙

가. 배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신의칙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높은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문제이다. 우선 이 문제의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발생을 전제하므로,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살은 재해사망보험의 보험사고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한동안 여러 보험회사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는 일정한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만한 조항(자살면책제한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약관 유형별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어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표 Ⅲ-1〉 약관 유형별 대법원 판결

유형	약관 내용	관련 대법원 판결
제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계약 일반사망 보장 • 특약 재해사망 보장 •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주계약에 두고 특약에는 주계약 준용조항을 둠 	2009. 5. 28, 2008다81633 판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 부정)
제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계약 일반사망 보장 • 특약 재해사망 보장 •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주계약, 특약에 각각 둠 	2016. 5. 12, 2015다243347 판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 긍정)
제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계약에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모두 보장 • 주계약에 자살면책 제한조항 존재 	2010. 11. 25, 2010다45777 판결 (재해 장해연금 지급의무 부정)
제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계약 특수재해사망 보장 • 특약 일반재해사망 보장 •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주계약에 두고 특약에는 주계약 준용조항을 둠 	2007. 9. 6, 2006다55005 판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 긍정)

나.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문제

위 표에 따르면 제2유형과 제4유형의 경우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긍정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유족들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2016. 9. 30, 2016다218713, 218720 판결에서 내려졌다. 이 판결은 제2유형에 해당하는 약관을 다룬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일반론을 제시한 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항

변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현재까지 확립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려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누구라도 권리의 존재를 알 수 없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이 행동하여 채권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부여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는 변제를 하면서 해당 채권자에게는 이행을 거절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중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 존재하는 사정은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례가 그동안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보았던 사례들은 대부분 과거 국가가 조직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시효를 내세워 배상을 거절한 사례들이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소멸시효와 신의칙 법리로는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봉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 이후에 행정적,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금융 당국의 강한 압박 아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도 지급되었으나, 적어도 법리상으로는 위 대법원 판결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V. 관련 법안 분석

1. 개관

이 목차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안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이 주제에 관한 현재의 입법론을 자연스럽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모두 6개이다. 발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법안

의안 번호	관련 법률	대표 발의자	제안일자	심사진행상태 (2017. 8. 16 기준)
2000833	보험업법(개정)	박용진	2016. 7. 12	소관위접수
2001017	상법(개정)	주승용	2016. 7. 21	소관위접수
2002957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신설)	김선동	2016. 10. 27	소관위접수
2004888	상법(개정)	정재호	2016. 12. 30	소관위접수
2005111	상법(개정)	김해영	2017. 1. 16	소관위접수
2005406	상법(개정)	민병두	2017. 2. 2	소관위접수

이를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 법안은 편의상 대표 발의자 이름으로 특정하였다.

〈표 IV-2〉 쟁점별 정리

쟁점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소멸시효 기산점 변경	김선동 의원안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 시효 특례 규정
소멸시효 기간 연장	정재호 의원안, 김해영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 에서 5년으로 연장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	박용진 의원안, 주승용 의원안	보험금지급청구 또는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보험 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

아래에서는 쟁점별로 나누어 관련 법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김 선동 의원안은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에 국한된 특별법이므로 별도로 검토한다. 나 머지 다섯 개 안은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일반의 문제를 다루는 안이다. 이 다섯 개 안은 하나로 묶어서 검토한다.

2.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법안

가. 법안 소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자살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에 대 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관의 내용이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 하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내

용대로 자살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데, 그럼에도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해당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는 2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약관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생명보험사의 책임이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통해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보험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보험계약으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사망보험 특약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만료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보험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사망보험금의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사망보험”이란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재해사망보험계약 중 책임개시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보험계약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특약이 있는 계약을 말한다.
2. “재해사망보험금”이란 재해사망보험에 부수된 특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보험금을 말한다.

제3조(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재해사망보험의 수익자는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보험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청구권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나. 법안 검토

1) 법안의 배경과 내용

위 법안은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법안이다. 아래에서 살펴 볼 다른 법안과 달리 특정한 유형의 사건과 관련된 특정한 유형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서만 소멸시효의 특례를 정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됨으로써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요약하면 ①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약관의 4가지 유형별로 지급의무 여부가 달라지고, ②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원래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이 법안은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두 가지 중요 쟁점, 즉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와 소멸시효 중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두는 법안이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유형의 보험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법안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3년간 진행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살사망자의 유족들에게 권리 행사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이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들이 당초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 보험회사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³⁴⁾ 그 결과 보험

3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5. 24),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view.jsp?seqno=19489&no=1&s_title=%C0%DA%BB%EC&s_kind=title&page=1)

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³⁵⁾ 이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이 법안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보험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특별법을 만들어 피보험자나 그 유족들을 추가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대하여 법 이론적, 법 정책적 검토를 하는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제3조이다. 제3조는 “재해사망보험의 수익자는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제3조는 보험금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변경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다. 이 법안이 다루는 사건 유형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자살 시점이다. 그러므로 원래 자살을 이유로 한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자살 시점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이 법 시행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둘째, 제3조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또는 소멸시효 완성효의 반복을 야기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 중인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에는 기산점 변경을 통하여 기존에 진행되던 소멸시효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효과를 누린다.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완성의 효과를 제거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35) 정영현(2017. 2. 23), “교보생명,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 지급 결정”, 서울경제(<http://www.secdaily.com/NewsView/1OC7FN7ZGZ>)

2) 법안에 대한 검토

이 법안은 자살사망자의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 이론적으로 보면 이 법안에는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이 법안의 취지는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 소멸시효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법적 안정성이다. 법적 안정성은 법 생활에서 구체적 정의와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민사법의 영역에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현재의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관철되어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현재의 법 상태를 적법한 것으로 만든다.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법 생활의 기초가 갑자기 뒤흔들리는 상황을 막는다. 소멸시효제도는 이러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제도이다. 대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멸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된 것이다.³⁶⁾ 이처럼 소멸시효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랜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소멸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발생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러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구체적 정의에 관한 관념에 기초한다. 그러나 구체적 정의라는 가치는 이미 법적 안정성이라는 반대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소멸시효제도 그 자체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만을 내세워 소멸시효제도를 무력화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모두 권리자의 권리 행사 필요성과 의무자나 사회의 법적 안정성의 도모를 조화시키는 법적 장치들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합의되고 조정되어 있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사후에 입법적으로 무력화시킴으로써 소멸시효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린다.

36) 대판 2016. 9. 30, 2016다218713, 218720

물론 이러한 결과를 감수하고서라도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관철시켜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구체적 정의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압도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소멸시효와 신의칙에 관한 법리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³⁷⁾ 그런데도 이 법안은 다시 이와 다른 가치 판단 위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특정한 사건 유형에 관하여 오랜 법리 다툼 끝에 내려진 법적 판단의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법 이론적으로 정당화되려면 세심하고 엄밀한 반대 논증이 필요하다.

둘째, 이 법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자가 누리고 있는 시효이익을 사후에 박탈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³⁸⁾ 그 중 진정소급입법은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³⁹⁾ 그런데 이 법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보험회사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진정소급입법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⁴⁰⁾

37) 대판 2016. 9. 30, 2016다218713, 218720

38) 대판 2017. 10. 11, 2005두5390; 대판 2014. 6. 12, 2014다12270

39) 대판 2017. 10. 11, 2005두5390; 대판 2014. 6. 12, 2014다12270

그러므로 이 법안은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높은 검증의 잣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소비자(엄밀히 말하면 소비자의 유족)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이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인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이러한 요청은 이미 지금까지 설명한 소멸시효제도 내부의 각종 장치나 소멸시효제도 외부의 신의칙에 의하여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청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요컨대 이 법안이 진정소급입법에 요구되는 높은 검증의 잣대를 통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특정한 유형의 보험상품에 관한 보험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만 집중한다면 이 법안의 취지에는 일면 수긍할 여지가 있지만, 법질서와 법적 가치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 결과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40) 현재결 2011. 3. 31, 2008헌바141

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일반 관련 법안

가. 법안 소개

1) 정재호 의원안

- 법안 요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함.

최근 자살보험금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과 보험사의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함.

통상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하여 유독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기로 규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감.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이는 전적으로 입법적 결단에 해당함.

이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상사채권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2조 중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을 “보험금청구권은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김해영 의원안

- 법안 요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설명의무 미 이행 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 사건이 있었음. 이에 법원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으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662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2조 중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을 “보험금청구권은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 제95조의2의 설명의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민병두 의원안

- 법안 요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주관적 체계 선택 / 보험금 지급 유예 시 소멸시효 정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로 되어 있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는 약 3만여 건(110여 원 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당초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고,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반환청구권 등이 여타 청구권에 비해 단기로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자 함.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662조 제1항, 제662조 제2항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2조 중 “3년간”을 각각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그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유예되는 경우 보험자의 결정이 서면으로 도달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박용진 의원안

○ 법안 요지: 보험금 지급 청구 후 회신 시까지 소멸시효 중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소멸시효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여전히 보험회사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3절에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시효의 중단)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주승용 의원안

- 법안 요지: 보험자의 귀책 사유 존재 시 또는 금융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지난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해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당시 보험사는 명시된 약관의 내용대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내용을 단순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 주장하며 고객에게 재해사망금의 지급을 거부해 왔음. 특히 현행법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에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분쟁 대상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단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법안에 대한 검토

위 다섯 개 법안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박용진 의원안을 제외하면 모두 상법 개정안이다. 이 다섯 개 안들은 소멸시효 기간 연장(정재호 의원안, 김해영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채택(민병두 의원안),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민병두 의원안),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박용진 의원안, 주승용 의원안), 설명의무 위반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김해영 의원안)이라는 다섯 가지 쟁점들을 다룬다. 그런데 이 쟁점들은 모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개별적인 검토를 행한 뒤,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전반에 관한 보고자의 입장을 종합 검토 부분에서 밝히기로 한다.

1) 소멸시효 기간 연장

정재호 의원안, 김해영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세 법안 모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모두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사태를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태를 계기로 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보다 짧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종국적으로 양자를 통일하고자 한다.

소멸시효 기간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 즉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그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가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는 법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은 일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가 더 오랫동안 존속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가 더 강하게 보호된다.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상품의 개인 소비자인 경우 위험분산을 통한 소비자들의 복리도 향상된다. 반면 보험회사는 더 오랫동안 보험금채무를 부담하는 상태가 되고,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그만큼 보험회사의 재정적 부담, 나아가 보험재원을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험단체의 구성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떠한지는 법적 분석을 행하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세세하게 분석하지는 않는다.

보험금청구권의 적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감(感)을 형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래는 Thomson Reuters의 『Practical Law』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 번역한 것이다.⁴¹⁾ 상세한 내용은 당해 웹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자료는 각국

의 법률가들이 각자 자국의 제도를 소개한 것을 표로 요약하여 놓은 것이어서 국가마다 사용하는 법률용어나 개념, 내용의 초점이나 구체성이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편의상 원 자료에 나온 대로 국가명 알파벳 순서대로 표를 구성하였다.

〈표 IV-3〉 국가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국가	기간
호주(Australia)	개별 계약에서 권리행사기간 결정.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은 없음
아르헨티나(Argentina)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년. 단, 소비자가 권리자인 경우에는 3년.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알게 된 때부터 1년. 근로재해 관련하여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2년 또는 근로계약 종료 시부터 2년. 재보험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시효 기간 없음
버뮤다(Bermuda)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6년
브라질(Brazil)	일반적으로 1년
캐나다(Canada)	주마다 다름. 예컨대 온타리오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권의 존재가 발견된 때부터 2년이지만, 화재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는 1년임
중국(China)	일반적으로 2년, 생명보험은 5년
프랑스(France)	일반적으로 2년,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10년. 재보험은 5년
독일(Germany)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로서 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안 때가 속하는 연도말로부터 3년
홍콩(Hong Kong)	일반적으로 6년.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인도(India)	보험계약으로 정하지만, 아무런 정함이 없으면 3년
인도네시아(Indonesia)	보험계약으로 정하지만, 아무런 정함이 없으면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30년) 적용
아일랜드(Ireland)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6년
이탈리아(Italy)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2년
일본(Japan)	3년(계약으로 단축할 수 없음)
케냐(Kenya)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짐. 일반적으로 3년
쿠웨이트(Kuwait)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3년. 해상보험의 경우는 2년

41)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8-518-2251?_lrTS=2017081605162891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8-518-2251?_lrTS=2017081605162891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 (2017. 8. 21 최종 방문)

〈표 IV-3〉의 계속

국가	기간
말타(Malta)	손해보험의 경우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2년.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지급의무는 5년
멕시코(Mexico)	일반적으로 2년. 생명보험은 5년
뉴질랜드(New Zealand)	일반적으로 6년
노르웨이(Norway)	일반적으로 3년. 자본보험(capital insurance)과 종신연금보험은 10년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재산보험은 2년. 생명, 신체 또는 타인의 재산에 관한 보험은 3년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자동차강제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부터 3년. 다른 보험은 5년
싱가포르(Singapore)	보험금청구권 발생 시부터 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보험금청구권 발생 시부터 3년. 일반적으로는 보험계약 자체에서 정함
스페인(Spain)	손해보험은 2년. 생명보험은 5년
스웨덴(Sweden)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10년. 비즈니스 보험(insurance policy)의 경우에는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음
스위스(Switzerland)	보험계약은 보험금청구권 발생 시부터 2년(계약으로 단축 불가). 재보험계약은 보험금청구권 발생 시부터 10년(계약으로 변경 불가)
대만(Taiwan)	권리 행사 가능한 때부터 2년
태국(Thailand)	손실(loss) 발생 시부터 10년
터키(Turkey)	일반적으로 보험금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시부터 2년 또는 보험 사고 발생 시부터 6년. 책임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10년
아랍에미리트연방 (United Arab Emirates)	일반적으로 3년
영국(United Kingdom)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계약위반에 관한 6년이 적용됨
미국(United States)	주별로 다름
베트남(Vietnam)	손실(loss) 발생 시부터 2년

위 표에서 보듯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멸시효의 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을 법률로 정할 것인가,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또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중 어느 입장을 채택할 것인가, 보험 유형별로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할 것인가, 계약으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법례는 태도를 달리한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러한 세밀한 문제들을 일단 제쳐놓고 일반적인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만 대략 보면, 1년(아르헨티나, 브라질), 2년(캐나다 온타리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대만, 베트남), 3년(오스트리아, 쿠웨이트, 노르웨이, 벨기에, 독일, 인도,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연방), 6년(버뮤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 터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일랜드, 영국), 10년(스웨덴, 태국), 30년(인도네시아) 등 국가에 따라 다양한 입법례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소멸시효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는 법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소멸시효 기간은 그 입법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전체적인 법 체계와 법문화, 국민들의 법의식의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도 하다.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 구체적 정의의 요청 가운데 전자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짧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짧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소멸시효 기간의 설정 문제는 소멸시효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가령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주 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의무자 입장에서는 권리자가 언제 권리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고, 권리자의 권리 발생 사실 인식 시점은 권리 발생 시점보다 뒤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권리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장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부여하여 그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한 어느 안이 다른 안보다 논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그 나라의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 입법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갈 문제이다. 이러한 입법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 입법적 선택지이다.

2)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

민병두 의원안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주관적 체계를 선택하고 있다. 즉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그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주관적 체계를 채택하거나 적어도 주관적 체계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최근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국제적 흐름이기도 하다. 또한 주관적 체계는 권리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비로소 시효완성의 불이익을 안기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정당화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민병두 의원안 외의 다른 법안에서는 주관적 체계를 선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최근의 국제적 흐름, 특히 그 흐름하에 작성되었던 민법 개정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법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다만 민병두 의원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의 문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소멸시효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라고 하여(제166조 제1항), 객관적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판례 역시 권리가 발생하였지만 권리자가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권리자의 주관적 사정은 이른바 ‘사실상 장애’로 보아 시효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본다.⁴²⁾ 즉 우리 민법이 기초하고 있는 객관적 체계는 해석론으로도 일관성 있게 관철되고 있다.⁴³⁾ 그런데 보험금청구권에만 국한하여 주관적 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전체 소멸시효 법의

42) 대판(진) 1984. 12. 26, 84누572; 대판 2004. 4. 27, 2003두10763 등 다수

43) 물론 우리 판례 가운데에는 위와 같은 주류적 해석과 달리 기산점 설정 시 권리자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한 경우도 있음. 가령 대판 1977. 12. 13, 77다1048; 대판 1993. 7. 13, 92다39822; 대판 2001. 4. 27, 2000다31168; 대판 2003. 2. 11, 99다66427; 대판 2003. 4. 8, 2002다64957; 대판 2006. 1. 26, 2004다19104 등이 그러함. 이러한 판결들은 객관적 체계를 예외 없이 밀고 나갈 때 생길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결여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권리자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됨

체계에서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의 문제는 소멸시효 기간의 논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실제로 외국 입법례를 보면 주관적 체계를 선택한 국가들은 객관적 체계를 선택한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두고 있다. 독일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독일민법은 원래 객관적 체계를 선택하면서 30년이라는 장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해 주관적 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대폭 단축하였다. 이처럼 주관적 체계 도입이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과 연동되는 것은 주관적 체계의 단점, 즉 권리자의 인식 여부라는 불명확한 주관적 요소에 시효완성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권리자가 어느 시점에 자신의 권리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주관적 요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 체계를 채택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컨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의 문제는 소멸시효 기간과 연계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셋째, 민병두 의원안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우리 판례들 중 주관적 체계에 기초한 듯한 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예외적인 판례가 적용되려면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② 그 결과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민병두 의원안은 ①의 요소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②의 요소들 중 무과실 부분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물론 입법이 기존 판례에 따라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 보험금청구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역으로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은 민법 소멸시효 체계의 정비와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갈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은 현행대로 3년을 유지하고 주관적 요건에는 “알지 못하였을 때”도 추가하는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주관적 체계만 선택하였을 때에

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효가 계속하여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보험을 둘러싼 법률관계 및 재산상태의 명료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객관적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가령 ①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② 보험금청구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 중 어느 한 쪽의 기간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면 보험관계가 적어도 5년 이내에는 확정되어 법적 안정성에도 모할 수 있고, 보험금청구권자도 현재의 3년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3)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

민병두 의원안은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즉 “보험금 지급이 유예되는 경우 보험자의 결정이 서면으로 도달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는 개정안 제662조 제2항 단서가 그것이다.

민병두 의원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소멸시효 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보험금청구권의 보호를 지급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것임은 명확하다. 아울러 이 제안의 배후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장해정도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행의 유예를 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판례⁴⁴⁾의 취지도 참조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시효정지 사유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 소멸 후 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사유를 말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회사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이와 별도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리라 객관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효정

44) 대판 2012. 3. 15, 2010다53198 등 다수

지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기존 민법 시효체계와도 정합성이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유예되는 경우 보험자의 결정이 서면으로 도달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표현은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뒤 이에 대한 보험자의 결정이 서면으로 도달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라는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더 명확하다. 보험금 지급 유예의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어떤 경우에 유예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추가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안의 시효정지안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현행 민법상 시효정지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정지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시효 기간의 진행이 멈추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 예컨대 민법 제182조는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라는 표제 아래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천재 기타 사변이 있는 동안에도 시효 기간은 계속 진행하지만 천재 기타 사변이 있는 동안 시효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시효완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천재 기타 사변이 사라진 후 1개월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시효정지제도는 시효 기간을 멈추는 제도가 아니라 시효완성 후에도 일정한 기간(6개월 또는 1개월)의 권리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독일민법상 완성유예(Aufhemmung)제도가 우리 민법의 시효정지제도에 해당한다. 민병두 의원안이 상정하는 시효정지는 이러한 의미의 시효정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당해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시효 기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시효정지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독일민법상 시효정지(Hemmung der Verjährung)제도가 바로 이러한 제도이다.

4)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

박용진 의원안과 주승용 의원안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주승용 의원안은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를 각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하였다.

우선 박용진 의원안의 경우처럼 보험금 지급청구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는 것도 입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보험금 지급청구가 재판상 청구라면 이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입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박용진 의원안은 재판 외 보험금청구의 경우에만 의미를 가진다. 재판 외 보험금청구는 최고로서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과가 소멸된다는 제약을 안고 있다(민법 제174조 참조). 박용진 의원안은 이러한 제약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는 최고에 잠정적인 시효중단 효력만을 인정하는 민법의 태도와 괴리가 있다. 앞서 소개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현재처럼 잠정적인 시효중단효력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고 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불명확하다. 재판상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압류·가압류·가처분의 경우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보전의 효력이 소멸한 후, 승인의 경우 승인 직후부터 새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그런데 최고에 대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이른바 계속적 최고의 법리가 존재하고 있어, 과연 최고의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결국 위에서 본 것처럼 보험금지급 청구는 시효정지 사유로 인정하는 쪽이 현행법과의 괴리를 줄이면서도 보험금청구권자를 보호하는 더 좋은 절충책이 아닌가 생각된다.⁴⁵⁾

한편 주승용 의원안 중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시효중단 사유로 부적절하다. 시효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의 토대 위에 설계된 제도이다. 확정적인 시효중단 사유의 다수가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외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유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시효중단 사유이다.⁴⁶⁾ 설령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

45) 백영화(2017. 4. 17)

유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보험자와 보험금청구권자 모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때가 시효중단 시점이 될 텐데 특정한 사건 또는 관념의 통지 등 적극적인 상황을 시효중단 시점으로 삼는 것은 명확하지만, 지급하지 않는 소극적인 상황을 시효중단 시점으로 삼게 되면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자마자 시효가 진행됨과 동시에 중단되는 꼴이 되어 어색하다.

마지막으로 주승용 의원안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시효중단 사유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⁴⁷⁾ 위 법률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한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러한 이유로 민법에서는 화해를 위한 소환에도 제한적으로나마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다(민법 제173조). 그러므로 이러한 화해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조정법 제29조 및 제3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2에서 조정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만 이는 보험금청구권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동일하게 적용될 문제이므로 상법보다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⁴⁸⁾

46) 백영화(2017. 4. 17)

47) 백영화(2017. 4. 17)

48) 백영화(2017. 4. 17)

5) 설명의무 위반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김해영 의원안은 제622조에 단서로 “다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 제95조의2의 설명의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설명의무 위반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와 같은 문언만 보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에는 아예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험금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하다. 제안이유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서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김해영 의원안은 아마도 후자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김해영 의원안의 특성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넘어서서 소멸시효 적용 배제까지 인정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과 소멸시효 적용을 연계하는 예는 우리 법제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어색한 면이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촉진하고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이다.⁴⁹⁾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이러한 권리 행사 가능성과 권리 행사의 태만함이라는 잣대로 판단할 것이지, 이와 전혀 무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49) 대판 1976. 11. 6, 76다148

또한 실제적으로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좌우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로 설명하여야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인지 등은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명의무와 소멸시효 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4. 종합 검토

지금까지 검토한 쟁점들은 세부적으로는 시효제도의 다른 분야들에 걸쳐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상호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법 전체 체계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는 소멸시효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전체 쟁점들에 대한 보고자의 입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4〉 법안별 종합 검토

쟁점	관련 법안	내용	입장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 특별법	김선동 의원안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변경 내지 기간 연장, 소멸시효 완성효 반복	특정한 유형의 보험상품에서 파생된 문제만을 다루고 있고 소급입법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소멸시효 기간 연장	정재호 의원안, 김혜영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입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안임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	민병두 의원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	민법 소멸시효 체계 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장기 과제임. 만약 이를 단기간 내에 입법한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현행법과 같이 3년으로 유지하고, “알 수 있었을 때”도 요건으로 추가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객관적 체계에 따른 5년의 상한선이 있는 것이 바람직함

〈표 IV-4〉의 계속

쟁점	관련 법안	내용	입장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	민병두 의원안	보험금 지급 유예 시 보험자 결정 서면 도 달 시까지 시효 정지	입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 안임. 표현 수정 필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	박용진 의원안, 주승용 의원안	보험금 지급 청구, 보 험자 귀책 사유로 인 한 부지급, 금융분쟁 조정 신청을 시효중 단 사유로 추가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자 귀 책 사유로 인한 부지급은 시 효중단 사유로 부적절, 금융 분쟁조정신청은 시효중단 사유로 적절(단, 상법이 아 닌 금융위원회법 개정)
설명의무 위반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김혜영 의원안	설명의무 미이행 등 의 경우에 소멸시효 미적용	설명의무 위반과 소멸시효 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

V. 결론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제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Ⅱ. 소멸시효 일반론』에서는 논의의 기초 자료로서 소멸시효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Ⅲ. 관련 판례 분석』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룬 판례들을 분석하였으며, 『Ⅳ. 관련 법안 검토』에서는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고자의 입장을 밝혔다.

보험제도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보험금청구를 둘러싼 법적 논의의 필요성은 점점 확산될 것이다. 최근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과 사태 속에서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이에 관한 법적 분석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 보고서가 이러한 법적 분석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권영준(2009. 6),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 pp. 10~12, p. 21

_____ (2017),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 간행 예정

_____ (2017. 2), 「2016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법학』, 제78호, p. 544

김용담 편(2010a), 『주석민법』, 총칙(3), p. 486, pp. 546~547, p. 572, p. 636, p. 646(이연갑 집필부분)

_____ (2010b), 『주석민법』, 물권(1), p. 688(김진우 집필부분)

백영화(2017. 4. 17),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법안 검토」, 『KIRI 리포트』, pp. 17~19 참조

양창수·권영준(2017),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3판, 박영사, pp. 545~546

한기정(2017), 『보험법』, 박영사, pp. 620~621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8-518-2251?__lrTS=20170816051628

91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

hcp=1(2017. 8. 21 최종 방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 · 정인영 2017.5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이해은 2017.8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 · 박지윤 2017.8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 · 이규성 2017.9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종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 진 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2014.3
- 2014-3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 김경환 ·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직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해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진 익 · 김상수 · 김종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계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슬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보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 황인창 · 이정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 · 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 ·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	--------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 · 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 youngjoon@snu.ac.kr)

연구보고서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발행일	2017년 9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	-------

ISBN 979-11-85691-64-0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